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2021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2. 일 시: 2021. 8. 31(화) 14:00~16:30
3. 발표자: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투신취안(屠新泉) 원장

1. 미·중 무역관계

- [2020년 4월 미·중 무역 관계] 미·중 1단계 합의는 미·중 무역분쟁의 단계적인 실패일 뿐 경제·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큰 추세를 바꿀 수는 없으며, 현재 미·중 양국은 모두 2단계 협상을 추진할 시간과 여력이 없음.
- 미·중 무역분쟁의 근본 원인은 체제 및 권력 경쟁에 있으며,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판단됨.
 - 특히 코로나19는 양국 간의 체제 및 권력 경쟁을 기반으로 국제 영향력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킴.
- 중국은 계속해서 1단계 합의 중 제시된 제도개혁 및 농산물 구매와 같은 일부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나 합의 내용을 100% 이행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임.
 - 그 이유는 첫째, 구매하기로 합의한 양이 너무 많은 것이고 둘째, 코로나19의 대규모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와 무역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임.
- 당시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미·중 관계의 미래 방향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트

럼프가 연임하면 미·중 간 탈동조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관계가 전환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함.

- 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 중국은 CPTPP 가입 등 국제규칙과 연결할 준비를 가속화하고, 미·중 관계를 적극 완화시키며, 경쟁은 하지만 파국은 피하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었음.
-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 이전에 제정한 TPP 규칙에 순응하고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2021년 미·중 무역관계] 미국이 중국에 취했던 301조 관세를 비롯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대와 달리 개선되지 않음.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취했던 301조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 취했던 232조 관세도 취소하지 않음.
- 비자, 영사관, 교육·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취했던 제한 조치를 유지함.
-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상호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함.
- 중국을 겨냥한 여러 가지 법안과 의안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정함.
 - 반도체, 희토류 등 중점 산업의 공급망 지원 계획을 제정함.
- WTO 상소기구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함.
- 중국이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이성을 저평가했다면, 지금은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성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임.

□ 현재까지 미·중 간 경제·무역 관계의 탈동조화는 예상만큼 빠르지 않음.

- 2019년 중국의 대미 교역규모는 3조 7,3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함. 이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한 영향도 있지만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것과도 관련이 있음.
- 2020년 미·중 양국의 상품무역 총액은 4조 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해 중국 무역총액의 12.6%를 차지함.
 - 그 중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3조 1,300억 위안과 9,318억 7천만 위안으로 각각 8.4%, 10.1% 증가함.
-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누적)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미중무역전국위원회가 2020년에 발표한 『중국비즈니스환경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 기업 중에서 91%는 2020년에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수익을 거두었다고 답했고, 87%는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중의 양방향 신규 투자, 특히 중국의 대미 투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음.
- 실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주요 투자국이 아니었음.

그림 1. 2000~2020년 미·중 F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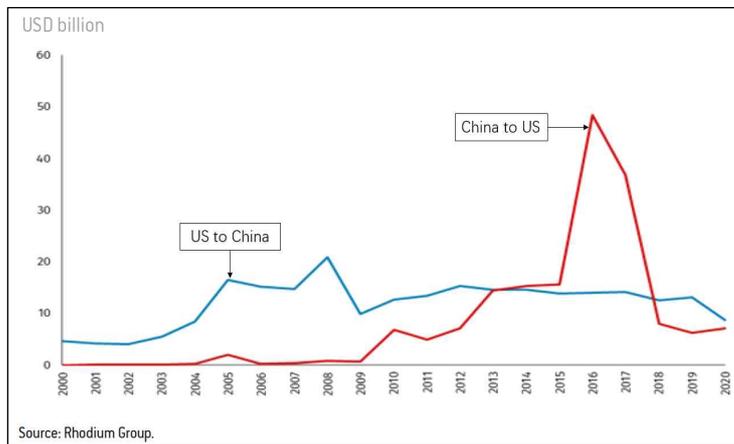


그림 2. 1987~2019년 미국의 대중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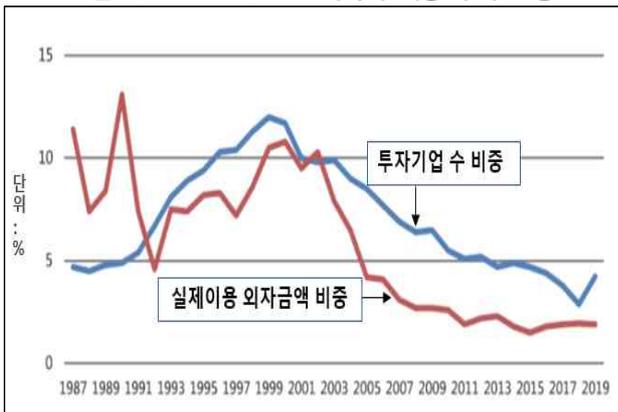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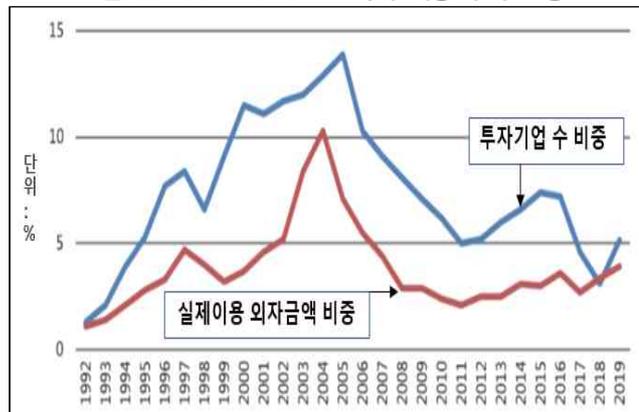


그림 3. 1992~2019년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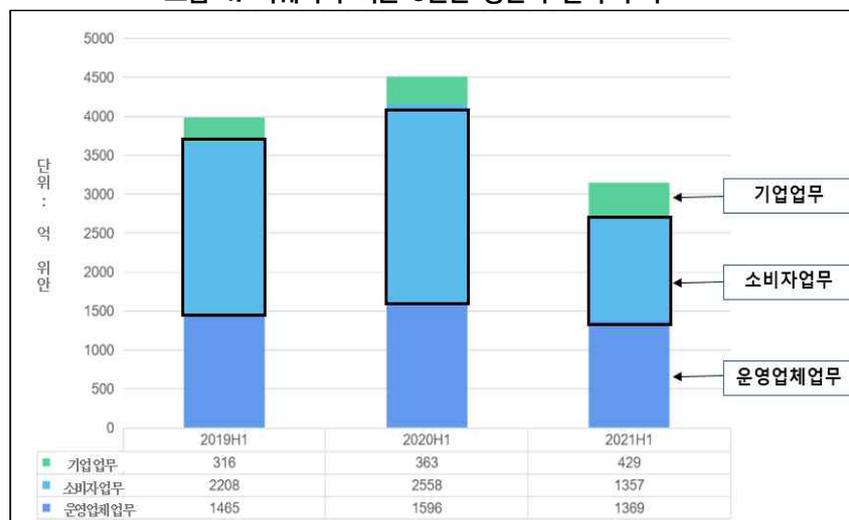


□ 미·중 간 탈동조화가 중국에 미친 충격도 예상보다 미미함.

- 2019년 중국의 상품무역 총액은 31조 5,400억 위안으로, 2018년 대비 3.4% 증가하였고, 2020년 중국의 상품무역 총액은 32조 1,600억 위안으로 2019년 대비 1.9% 증가함.

- 2019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4만 1,000개이며,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1,412억 3천만 달러임.
- 2020년 중국의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9,999억 8천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함(달러 기준으로는 1,443억 7천만 달러이며, 전년대비 4.5% 증가).
- 2020년 중국의 GDP는 101조 5,986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함.
- 화웨이(华为)에 대한 타격은 초기에 효과를 거두었지만 화웨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

그림 4. 화웨이의 최근 3년간 상반기 실적 추이



-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무역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위 말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정책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미국은 여전히 WTO 상소기구의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더 이상 현행 국제규칙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국제규칙을 바꾸고자 하는 태도를 표명하는 것임.
 -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은 관세를 인상하고 보조금을 증가시켜 미국 제조업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 무역정책의 단계적 목표는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과 연합하여 소위 "민주국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임.
 -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더 격화시키지 않거나 확대시키지 않는 것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중 양국은 향후 일부 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관세를 서로 철폐하거나 낮출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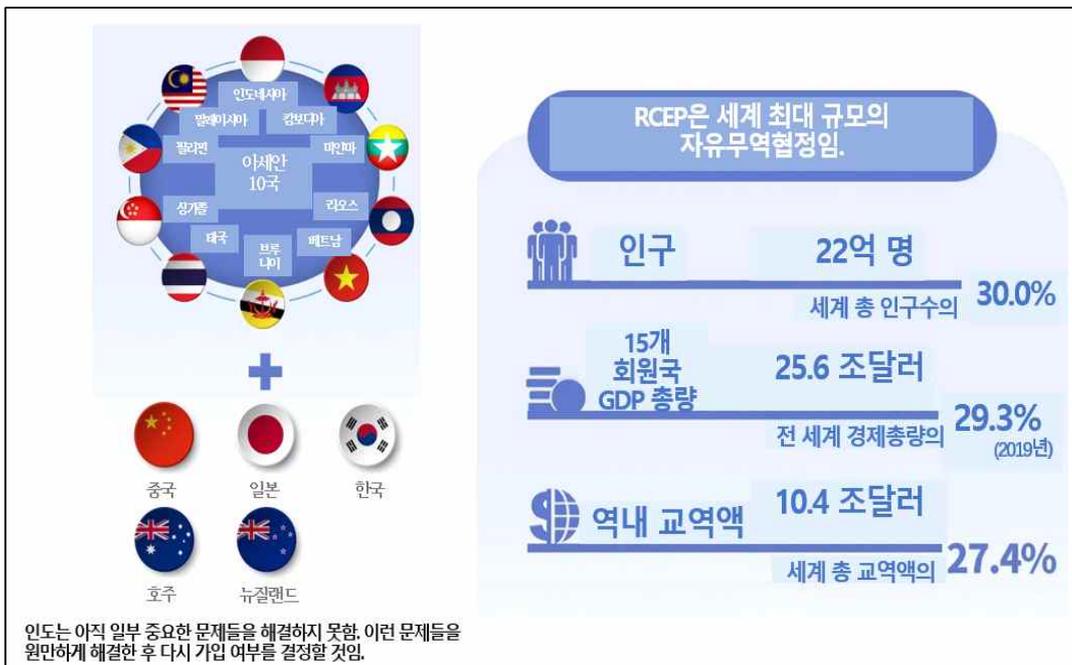
- 기술 분야에서의 디커플링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분야이며,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임.
-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더 이상 환상을 품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양보하거나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임. 평등한 자세의 외교 정책이 향후 미·중 관계의 전반적 기초를 변화시킬 것임.

2. RCEP 체결

- RCEP 체결은 최근 중국 경제외교의 가장 큰 성과로, △전면적이며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고 △높은 수준이며 △상호 호혜와 윈윈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전면적, 현대적] 20개 장(Chapter)과 4개 시장진입 양허표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역내 원산지 누적기준, 통관 원활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 내용이 모두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함.
 - 역내 원산지 누적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산업망·공급망의 발전을 지원
 - 새로운 기술을 채택해 통관 원활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경간 물류의 발전을 촉진
 - 투자 진입은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
 -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경제 시대의 수요에 부응
 - [높은 수준] 관세 부과 수준, 서비스무역과 투자 개방 수준 등이 모두 높은 수준임.
 - 상품무역에서 제로관세 상품수가 전체적으로 90% 이상이며, 서비스무역과 투자의 개방 수준이 원래의 "아세안 +1"보다 현저히 높은 편임.
 - 중국-일본, 한국-일본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양자 간 자유무역 관계가 새로 형성됨.
 - [상호 호혜와 윈윈] 회원국 간 발전 수준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각국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이익의 균형을 맞추므로써 '높은 수준'과 '개방성'을 조화시킴
 - 최빈개도국에 대해 차등대우를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경제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하여 개도국 회원국들의 자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주어 역내의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
- [RCEP의 경제적 효과] RCEP은 투자 자유화·원활화를 통해 더 나은 투자촉진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며, 투자 전망을 높여 역내 투자를 크게 촉진할 것임.
 - 역내 원산지 누적 규정은 회원국 간의 생산연계를 강화하고, 역내 산업망 분포를 최적화할 수 있음.
 - RCEP 회원국들의 경제구조는 상호 보완성이 아주 강하고, 역내에 자본 요소·기술 요소·노동력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양호한 산업망을 형성할 수 있음.

- RCEP의 체결은 역내가치사슬(RVC)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불확실성과 외부충격에 잘 대응하며 글로벌 산업 체인과 융합되는데 유리함.
- [RCEP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의] 역내 경제 파트너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중국 내 시장개혁과 무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중국 내 일부 생산시설을 다른 RCEP 회원국으로 이전시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 수출을 대체하는 등 미·중 무역마찰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동시에 RCEP 회원국은 중국 대외무역과 투자의 중요한 목적지이므로 RCEP의 발효는 중국의 무역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미·중 간 무역협상과 경쟁 과정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
- 높은 수준의 RCEP 경제무역 규칙은 중국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개혁을 심화하도록 추진할 수 있으며, 국내·국제 쌍순환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세 하에서 중국이 국제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그림 5. RCEP의 회원국 및 규모



3. WTO 개혁

- [WTO 개혁의 배경] WTO 개혁은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개혁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WTO가 직면한 어려움, 특히 협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 구조의 탈중심화로부터 비롯된 리더의 공백에 있음.
 - [미국] 미국이 주장하는 WTO 개혁은 WTO 체제를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WTO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심지어 WTO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이 WTO 개혁을 요구하는 근본 원인은 경제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에 있는데, 미국은 다자무역 자유화가 자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이 최대의 수혜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 중국은 WTO가 효율과 효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WTO의 기본 원칙과 메커니즘을 무너뜨리는 것에는 반대함.
 - [유럽과 일본] 유럽과 일본이 미국의 WTO 개혁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미국을 WTO에 남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중국의 경쟁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기타] 대다수 WTO 회원국들은 WTO의 시스템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
- [미국의 문제제기와 요구] 미국은 다자협상 메커니즘이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양자 협상을 위주로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복수국 간 협상도 배제하지 않음. 문제제기의 주 대상은 중국을 타겟팅한 것이 다수임.
 - 현재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미국의 주권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하며, 상소기구를 폐지하고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함.
 - 특별·차등 대우(SDT) 원칙을 통해 개도국이 미국의 편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등 발전된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 대우를 취소할 것을 요구함.
 - 현행 메커니즘이 비시장경제 국가를 제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시장적 행위를 제약할 수 있도록 중국을 포함한 복수국 간 규칙을 세울 것을 요구함.
- [WTO 개혁에 대한 전망] WTO는 미국이 기대하는 개혁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으며 각 회원국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혁보다는 복수국 간 협상 방식이 향후 WTO 협상의 주요 형태가 될 것임.

-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는 현재 임의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상소 메커니즘을 취소하는 등 일부 목표를 달성했음.
 - 상소 메커니즘이 중단됨에 따라 △대국은 임의로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 △소국은 이를 제한할 힘이 없으며 △대국 간의 상호 제재는 국제적 긴장국면을 심화시키면서 무역으로 평화를 촉진하려는 목표가 수포로 돌아가게 됨.
-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원활화, 서비스 국내 규제,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협상이 새로운 규칙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분쟁해결 메커니즘, 시장경제 지향, 개도국에 대한 특별 또는 차등 대우, 농업 등에 관한 의제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임.

□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 대우의 개혁 전망] 특별·차등 대우는 여전히 존속되어야 할 원칙 중 하나로,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나라에 대해 반드시 차등적인 무역 자유화를 실행해야 함.

- 개도국을 다시 분류하거나 퇴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실행 가능성을 갖추지 못함.
 - 미국이 개도국을 다시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 개도국들을 서로 분화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 승낙과 "무역 원활화 협정" 체결에서 "사안별 처리" 원칙은 진입장벽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식임.
- 향후 WTO 협상방식은 단일 의제·단일 부문의 복수국 간 협상을 위주로 진행될 것임. 개도국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며 실행할 필요도 없음. 복수국 간 협상이 바로 가장 큰 특별·차등 대우(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임.
- 중국의 입장에서는 개도국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며,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유연한 동맹결성 전략을 실시할 것이며, 무역 자유화의 적극 추진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정해야 함.

□ [WTO와 환경의제] WTO에서 환경보호 규칙이 제정되는 데에는 향후 오랜 기간동안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 무역정책이 응당 환경보호와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도 큰 논쟁이 있음.

- GATT 제20조 b항(협정적용의 예외)은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통해 환경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실제 실행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조치의 실시를 방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GATT나 WTO의 우선적인 목적은 무역 자유화에 있음.
- FTA 중의 환경보호 조항은 회원국이 환경보호 기준을 낮춰 불공정한 무역경쟁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역 자유화의 실현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도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선진국의 요구를 나타냄.
-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더욱 능동적·직접적으로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하여 경쟁국의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임.
 - WTO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무역정책이 환경보호와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도 큰 논쟁이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추가적인 관세조치로써 관세양허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WTO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음.

질의응답(Q&A):

Q1.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많은 이익을 취했음. 현재 중국은 미·중 갈등국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RCEP 등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서 제기하는 주장(불공정무역 등 주장)이나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 및 다른 작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어떤 주장이나 요구를 제기할 때 과연 중국이 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게 됨.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대중 무역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음. 중국은 자신이 미국보다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빼고 골목대장이 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 이런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A1. 중국이 외교관계 측면에서 미국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는 건 사실임.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일부 중국학자들 가운데는 중국정부가 미국을 너무 과도하게 중시한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음. 특히 유럽을 연구하는 중국 외교학자들은 국가 지도자들이 항상 미국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유럽에 대해선 반응이 느리거나 없다는 점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중국 정부가 미국의 태도를 중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또한 중국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미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임.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맺은 해에 대외개방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상호 인과관계가 있음. 이와 동시에 중국이 강렬한 대국의 자세(大国心态)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임. 중국이 비록 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큰 좌절을 겪었지만 대국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생각됨. 여기서 말하는 대국의 자세는 미국과 같은 강국에 대해 평등한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약소국가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중국의 이런 자세는 무역측면에서도 반영된 바 있음. 중국은 WTO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20~30회 소송하였고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서 미국과 EU 외에는 어느 나라와도 소송을 한 적이 없음. 오히려 인도가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제일 많이 했고, 이에 대해 중국의 반덤핑 관련 변호사들이 인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중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음. 그것은 중국정부가 인도를 대상으로 그러한 조치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모든 이익에 대해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 이런 자세가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대국의 자세이며, 중국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일부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중국은 절대적·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나라인데 국제 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RCEP의 경우에도 중국은 한 번도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 왔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국익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중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들을 향해 강압적인 요구를 제기한 적이 없음. 또한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향해 중국의 방식과 모델을 배울 것을 요구한 적이 없음. 우리는 중국이 RCEP 하에서 어느 국가도 리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중국은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를 리드할 수도 없고, 리드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음. 중국은 경제총량 등 면에서 규모가 확실히 크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기타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힘을 합쳐서 함께 미국과 싸울 수 있는 동맹이나 조력자를 합류시키고자하는 기대가 전혀 없으며, 미국과 싸워야 한다면 중국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함.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요청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의 국익과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존중해 주길 바라며,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입.

Q2. 발표내용 중 미국 무역정책의 단계적 목표가 "민주국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의 견해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주국가 공급망"이 구축된다면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이 RCEP에서 빠지게 된다는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2. "민주국가 공급망"의 본질은 냉전시기에 전 세계 공급망이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체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체계 두개로 나뉘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함. 냉전시기에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굶어죽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현재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그때는 국가 간의 경제무역 관계가 긴밀하지 않았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 세계 공급망이 영국과 프랑스의 각자 식민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들 사이에는 상호 연계가 아주 적었음.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나라와의 무역 거래가 별로 없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나라들과 연합하여 동방체계를 구축하였음. 미국은 영국·프랑스의 식민지 체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서방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때 전 세계가 동방과 서방으로 분화된 것은 전쟁이 초래한 결과임. 현재도 마찬가지로 "민주국가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지금의 전 세계 공급망을 두 개로 분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세상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으며, 더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므로 "민주국가 공급망"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으로 따로 분열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국부적인 디커플링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큰 동맹국인 일본은 RCEP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고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악화 중에 있는 호주도 빠른 시일 내로 RCEP 협정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함. 호주가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RCEP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음.

Q3. 8월 25일 영국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华为)가 신청한 수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용 반도체칩을 공급하려는 판매업자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함. 이에 대해 일부 중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동시에 또한 화웨이로부터 돈을 벌려고 한다고 비판했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3.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함. 자동차용 반도체칩은 집적회로에 대한 기술 요구가 비교적 낮은 분야이고 화웨이가 자동차산업에 진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누구에게도 압박이나 위협이 되지 않음. 현재 중국 반도체 분야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 미국은 중국에 대해 리소그래피(光刻機)와 같은 선진 제조설비, EDA(반도체 설계 자동화)와 같은 선진 디자인 소프트웨어, 선진 반도체 등의 품목에 대해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는 주로 화웨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화웨이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중국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사실 화웨이를 제재하는 데 대해 미국 국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음. 일부에서는 화웨이의 5G 기술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

다는 의견도 있으나, 화웨이의 휴대폰은 원래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미국이 공격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휴대폰 사업을 타격하여 퀄컴(Qualcomm) 등 미국 내 관련 기업들이 손해를 본 부분도 있음. 이번 자동차용 반도체칩의 경우는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됨. 자동차용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미국 내 모 기업이 화웨이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했고 미국 정부가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승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화웨이는 중국 기술혁신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이 화웨이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추후 화웨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미국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Q4.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A4. 중국 환경보호부는 이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음. 현재 중국의 각 관련 부처들과 학자들이 모두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의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며, 이는 국민대우에 기반한 국내 조치이지 국경조치(边境措施)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대우이며 관세양허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임.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함.

Q5. WTO 신임 사무총장이 올해 3월에 새로 취임했고 11월에 12차 장관회의(MC12)가 개최될 예정임. 현재 위기에 처한 WTO가 위상을 되찾고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많은 국가들의 기대도 있고 신임 사무총장도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통상의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중에서 중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는 무엇인지? 각 사안별로 합의 내지 타결될 가능성이 어떤지?

A5. 이번 12차 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몇 가지 의제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산 보조금 협상이었음. 수산 보조금 협상은 기존에 큰 진전을 거두었는데 현재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음. 그것은 바로 미국이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 원칙과 강압 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임. 이 협상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타결될 가능성이 또다시 불투명해 짐. 그 외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의료제품 무역의 원활화, 서비스 국내 규제, 투자 원활화 등 의제들도 있음. 서비스 국내 규제는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미국도 얼마 전에 협상에 참여했음. 투자 원활화 협상에는 현재까지 120여 개 국가들이 참여했고 대체적으로 합의를 달성한 상황임. 미국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참여하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임. 전자상거래 협상은 아직 최종 타결이 어려울 것이지만 부분적인 합의나 단계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수산 보조금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12차 장관회의가 성공적이라 평가하기 어려울 것임. 제네바에 있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WTO 신임 사무총장은 매우 높은 업무 열의와 업무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함. 그러나 WTO와 세계은행(WB)은 서로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며, WTO 신임 사무총장은 아직 WTO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업무 조율 과정에서도 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함.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WTO 신임 사무총장의 일부 입장 표

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도 있어 WTO 신임 사무총장이 현재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Q6. 발표내용 중에 CPTPP 가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RCEP 협정이 타결되고 나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향후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그 이후로 중국 내부적으로 CPTPP 가입을 위해 진행된 내용이 있는지?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은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6. 중국 정부의 CPTPP 가입에 대한 태도는 매우 엄숙하고 진지함. 현재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여러 부처들과 연구기관들이 모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CPTPP 가입에 있어서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국유기업, 노동표준, 전자상거래 등의 문제를 포함한 CPTPP의 내용임. 그러나 CPTPP 규칙들은 중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님. 사실 국유기업 문제 등은 중국 국내 개혁의 흐름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음.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 부처든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그러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임. 둘째는 국제정치에 관련된 영역임. 현재 중국은 CPTPP 11개 회원국과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음. 현재 CPTPP의 주도국은 일본인데 모두가 알다시피 중·일 관계는 아주 복잡하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미국을 우선적으로 CPTPP에 복귀시키고자 할 것이나 현재 미국 정부는 가입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임. 따라서 중국의 CPTPP 가입도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현재 CPTPP 11개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중국의 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나라는 없음. 당초에 미국이 TPP를 제기했을 당시에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TPP 규칙을 제정하였고, 중국을 TPP에 가입시켜 관련 규칙들로 중국을 통제하기를 희망하였음. 그러나 현재 CPTPP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가입 여부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중국의 가입에 대해 별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음. 일본의 경우에도 RCEP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임.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국유기업, 노동표준, 디지털 무역 등 문제들에 대해 현재 CPTPP 회원국들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중국이 CPTPP 규칙이 미국의 주도하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PTPP에 가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향해 중국은 국제질서의 파괴자가 아니며 국제규칙에 적극 순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 WTO 가입과 CPTPP 가입이 중국에 주는 의미는 크게 다름. 예전에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지만 CPTPP 가입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 사실 중국은 CPTPP 가입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 CPTPP 가입을 위한 연구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규칙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의 경제·사회적 체제 개혁을 추진하여 중국이 국제 주류 규칙에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지적하는 중국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임.